

제346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9월6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7.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0.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16. 재외국민보호법안
1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4.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5.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6.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7.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9.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31.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3.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36.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3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39.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4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47.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48.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
49.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
50. 현안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상정된 안건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3.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4.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7.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5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10.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5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1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종대·김해영·한정애·김경진·정성호·김중희·위성곤·유은혜·윤관석·황희·윤후덕·안규백·송옥주·강병원·서형수·서영교·최도자·우원식·김삼화·전해철 의원 발의)	8
16.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홍문종·윤종필·김성태·김종태·정갑윤·정병국·송희경·정운천·유재중 의원 발의)	8
1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운·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8
20.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광수·김영춘·김중희·김해영·손금주·박재호·김관영·윤관석·이동섭·정성호·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발의)	8
21.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2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24.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범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8
25.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8
26.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8
27.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8
2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29.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
30.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8
31.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3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33.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3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8
3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36.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8
3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8
3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8
39.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오제세·조정식·이찬열·노웅래·신경민·윤후덕·한정애·박지원·박광운·박영선·황희·정동영·송영길·박찬대·소병훈·김경협 의원 발의)	8
4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심재권·김병욱·김경협·김민기·이철희·인재근·정세균·전해철·박남춘·김경수·김병기·홍철호·박영선 의원 발의)	9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소병훈·윤	

후덕·김민기·노웅래·황주홍·강창일·김종회·윤호중·윤관석·김경진·민병두·박홍근·유승희·박경미·도종환·윤종오·유은혜·김철민·주승용·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원욱·황희·임종성·유동수·백혜련·백재현·박영선·신동근·김삼화·신창현·김동철·강병원·정성호·오제세·문미옥·강훈식·어기구·송기현·박광온·천정배·김관영·박주민·제윤경·최운열·정인화·신경민·박정·김현미·유성엽·전현희·김영주·최경환(국)·김경협·이철희·김해영·추혜선·김종대·박지원·표창원 의원 발의) 9

4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이원욱·어기구·김해영·김종민·김병관·문미옥·이인영·권칠승·백혜련·이훈 의원 발의) 9

4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송옥주·문희상·이인영·윤후덕·김경협·백재현·변재일·안규백·박주선·김종대·이춘석·김동철·최경환(국)·심재권 의원 발의) 9

4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헌승·정종섭·안규백·박완수·이우현·임종성·김현아·윤영일·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정태욱·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관영·유승민·김세연·유기준·하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9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경환(국)·김중로·정동영·강창일·정인화·황주홍·주승용·신용현·최도자 의원 발의) 9

46.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국)·김종회·김삼화·정성호·김동철·윤관석·이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상정·이정미·정인화·김병욱·황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완·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발의) 9

47.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48.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49.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1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7

1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7

14.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

50. 현안보고 19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찬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에는 한노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정기회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될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와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외교·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및 개성공단 재가

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 정기회 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서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20대 국회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정감사 등 정기회 활동을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준비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G20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수행 등을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임성남 제1차관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3.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4.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7.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계속)

8.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9.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0.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시08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협 소위원장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도읍 위원, 운영석 위원, 이인영 위원, 이태규 위원, 정양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여 조세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미 국세청에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30%가 원천징수가 되나 본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은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 국세청이 우리 국민의 미국 금융기관 내의 계좌 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역외탈세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규정에 맞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과의 경제활동 실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일반 국민보다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주신 김경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 دار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 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완료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10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은 정부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별로 미국 국제청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우리 금융기관을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 협력법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금융기관의 대미 투자·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투자보장 협정은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부가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2014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종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안을 근거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

해서는 경제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정감사와 실시된 안건들을 논의할 차례입니다. 우리 간사님들 간에 아직 의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먼저 처리하고 간사님들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정감사에 관한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5.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종대·김해영·한정애·김경진·정성호·김종희·위성곤·유은혜·윤관석·황희·윤후덕·안규백·송옥주·강병원·서형수·서영교·최도자·우원식·김삼화·전해철 의원 발의)
- 16.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홍문종·윤종필·김성태·김종태·정갑윤·정병국·송희경·정운천·유재중 의원 발의)
- 1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운·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 20.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김광수·김영춘·김종희·김해영·손금주·박재호·김관영·윤관석·이동섭·정성호·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발의)
- 21.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4.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25.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26.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27.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28.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9.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30.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 31.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2.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3.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4.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35.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36.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3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38.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 39. **통일경제자유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오제세·조정식·이찬열·노웅래·신경민·윤후덕·한정애·박지원·박광운·박영선·황희·정동영·송영길·박찬대·소병훈·김경협 의원 발의)

4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심재권·김병욱·김경협·김민기·이철희·인재근·정세균·전해철·박남춘·김경수·김병기·홍철호·박영선 의원 발의)

41.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소병훈·윤후덕·김민기·노용래·황주홍·강창일·김종회·윤호중·윤관석·김경진·민병두·박홍근·유승희·박경미·도종환·윤종오·유은혜·김철민·주승용·이춘석·원혜영·김정우·이원욱·황희·임종성·유동수·백혜련·백재현·박영선·신동근·김삼화·신창현·김동철·강병원·정성호·오제세·문미옥·강훈식·어기구·송기현·박광운·천정배·김관영·박주민·제윤경·최운열·정인화·신경민·박정·김현미·유성엽·전현희·김영주·최경환(국)·김경협·이철희·김해영·추혜선·김종대·박지원·표창원 의원 발의)

42.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주선·이원욱·어기구·김해영·김종민·김병관·문미옥·이인영·권칠승·백혜련·이훈 의원 발의)

4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송옥주·문희상·이인영·윤후덕·김경협·백재현·변재일·안규백·박주선·김종대·이춘석·김동철·최경환(국)·심재권 의원 발의)

4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현승·정종섭·안규백·박완수·이우현·임종성·김현아·윤영일·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정태욱·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관영·유승민·김세연·유기준·하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최경환(국)·김중로·정동영·강창일·정인화·황주홍·주승용·신용

현·최도자 의원 발의)

46.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국)·김종회·김삼화·정성호·김동철·윤관석·이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상정·이정미·정인화·김병욱·황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원·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발의)

47.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8.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49.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심재권** 의사일정 제15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 나오셔서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과주을 출신 박정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북부 접경지역 한 곳에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대응하는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은 국내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플랫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근로 경험을 재개하고 지속해 나가는 등 남북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공단으로 조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 경제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평화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 수준을 넘어 진정한 통일시대를 여는 절묘한 한 수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은 어디에 조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음에 주저 없이 제안을 드리건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가장 큰 파주, 그중 파주 민통선 일대가 바로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혹자는 지역 챙기기 식 법안이 아니냐고 평가 절하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통선 지역에 국제평화공단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조성된다고 해서 파주시의 지방세가 는 다거나 파주시민의 복지가 현격히 좋아질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파주시가 공단이 잘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동북아 최고의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요충지가 바로 파주인 것입니다.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익과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지역 간의 경쟁에서 유치하거나 여러 곳에 조성하기보다는 최적지를 골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이나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도 이를 뛰어넘는 국익적 시각에서 대승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건대 1단계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공단을 민통선 내에 조성하고, 2단계로 이곳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공단을 포함한 특구가 지

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원 하는 배후지로서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를 설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열린 공간 속에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안전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인 경제 성장판이자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파주에서 통일이라는 대역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을 각각 개별 법률로 입안하지 아니하고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하나의 법률로 단일화하여 법안을 설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일의 물꼬를 키우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고심과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 나오셔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874명으로 이 중 49%인 6만 3694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84%에 이르는 등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시한에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사망자가 3782명으로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할 때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

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면 국민 모두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민족 최대의 추석 명절입니다. 동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산가족들의 한을 위로하고 통일의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등 18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국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재국 신분증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둘째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담당영사가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탁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셋째 공증사무의 종류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문서 확인의 경우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처리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공관의 공증사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외이주 등록 등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지이주의 정의에서 거주여권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둘째,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령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이중제재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이주 관련 제반 환경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법률에 반영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안도라공국, 영국령 버진제도, 사모아독립국, 저지 및 건지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

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대한민국에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산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고자 우리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구 설립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시아 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다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범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4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범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형사 사범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취득, 정보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 이행 등 형사 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하며, 둘째 피요청 당사국은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범죄로 하며, 둘째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및 피청구 당사국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및 양해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칠레, 핀란드, 퀘벡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칠레, 핀란드, 퀘벡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핀란드, 퀘벡과는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르비아, 조지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 진출 개인 및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 간 항공 및 대기권·외기권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국 정부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항공, 우주 운영 및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항공기 비행 및 활동, 과학데이터의 교환, 전문가 교류, 유인탐사, 과학 관측 로켓 등의 비행 및 활동 등을 통하여 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행 기관으로 항공우주국, 해양대기청 및 지질조사국을, 우리나라의 이행 기관으로 기상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정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이행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바 향후 개별 이행 약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상의 협력 조건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초청에 따라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둘째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은 우리 정부의 관할권하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조약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정무, 경제, 글로벌 협력의 법적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 2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법체계상 수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는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체결·비준 행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적정 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체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의 정의와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 강제대피권 부여 등 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에 대한 폭넓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된 영사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 주재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을 추가·보완하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재외공관 공증제도는 공증인법에 기반한 국내의 공증제도와 달리 영사확인 등 특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촉탁인의 신원 및 대리권 유무의 확인, 서명부와의 대조방식에 의한 외국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 등 제도 운용에 있어 상당한 취약점을 드러냈는바 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지이주의 인정에 있어 거주여권 발급요건을 폐지함과 아울러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지이주자에게 해외이주 신고의무를 부

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제도가 사실상 신고자의 자율에 따라 운용되고 있고 법률상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시각장애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편의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점자여권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에 대한 보다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에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대륙붕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은 이미 대륙붕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는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륙붕을 규정하여 주권적 권리를 공고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적용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사모아독립국 정부, 저지 정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5건의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역외탈세를 규제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 상대국들은 역외탈세거래에 빈번히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나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고 회원국 자격을 아세안 국가에서 범아시아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동 기구가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여 아시아 내 각종 산림협력 사업 및 관련 교육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녹화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형사 사법공조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및 국제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범죄인 인도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인들의 해외도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국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형사 사법공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

부, 핀란드공화국 정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의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들이 체결되면 양국 간 인력 교류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며 사회보장 당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조지아 정부, 에티오피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3건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은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이중과세 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한미 우주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정상의 협력 절차 및 상호 책임 면제, 통관 등 협력 조건 등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우주협력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달 탐사를 포함해 규모면에서 보다 확대된 정부 간 우주협력의 추진과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의 향상 및 우주산업 성장 기반 마련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협정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

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이 향후 유럽연합의 민간 또는 군사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해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는 성격의 협정으로 유럽연합 측의 참여 초청 및 우리나라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참여 결정, 참여 이후의 협의를 통한 수정 또는 참여의 사 철회 등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즉각적으로 특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협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동 협정 체결에 따라 예상될 수 있는 국군 등의 해외 파견과 국회 동의권과의 관계 및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사안별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는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협정문상 불명확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1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정 의원 대표발의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과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남한과 북한이 상호 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등으로 동 제정안들은 남북 상호 간의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형성 및 교류 촉진, 접경지역 개발 등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현 남북관계 상황, 특구 지정에 관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쪽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5쪽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이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제정안을 입법함에 있어서 남북경제협력사업 및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 대북사업의 리스크 부담, 재정적 고려, 기존 법제도 및 원칙과의 상충 여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념일 제정은 이산가족 문제가 당사자들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7쪽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8쪽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은 남북한 모두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과 남북 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심재권 의원 소개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금강산 투자기업인들에게도 개성공단의 보험 미가입 업체에 지원한 투자금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45%를 동일하게 적용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동 청원은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도발이라는 외부변수에 따른 손실의 불가피성, 개성공단과 같은 유사 사례의 적용, 대북 리스크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의 원칙,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0쪽 심재권 의원 소개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게 제출하도록 한 협약서 및 동의서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피해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입주기업이 협력업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하고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령기업을 협력업체에게 공개하면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쪽 심재권 의원 소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입주기업 명단,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근거자료 공개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개별 협력기업이 입주기업과의 관계를 소명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현안보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 안건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재외국민보호법안 등 32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이태규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안전에 대한 상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국정감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미진한 논의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간사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국정감사에 관한 안전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02분)

○위원장 심재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 2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 27일 화요일에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12일간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 아주반, 아·중동

반, 구주반 등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모두 31개의 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등 10개 공관에 대해서는 통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다녀오신 후 10월 12일 수요일에는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과 경기도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목요일에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4일 금요일에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아·중동반을 신청드렸는데 여기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남아공 등 몇 나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새누리당 윤영석 간사님께 일정을 조정하고 또 아프리카·중동, 우리나라와 현안이 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가는 곳은 한 군데 가더라도 추가된 몇 나라를 요청드렸고.

또 서부아프리카는 빠져 있습니다, 남부아프리카와 동부아프리카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 가지고 가령 남부아프리카면 남아공과 짐바브웨는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아공에다가 짐바브웨 대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같이 국정감사를 하고, 빠져 있는 서부아프리카는 그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이런 데를 한 군데 추가해 가지고 그 인접 국가 중에 중요한 나라들, 가나라든지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 대사를 나이지리아에 같이 불러다가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국정감사 아·중동반은 김경협 간사님이 반장을 맡고 계신데 이주영 위원님 말

썸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 그러면 국정감사 기관은 추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조정하시면……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국감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증인 및 참고인 문제인데요.

일본 메이지 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인데 간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인인데.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렇게 고쳐 주세요.

○**위원장 심재권** 예.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자료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 1쪽의 정영환 증인은 참고인으로 자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 등에 따라 향후 사정 변경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요청이 있거나 재외공관 국정감사반 편성과 다른 사정 변경으로 국정감사 일정 등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과 관련하여 가급적 위원님들의 희망반을 중심으로 국감반을 편성하

고자 합니다. 그러나 편성 과정에 일부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희망과는 달리 편성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늦어도 금주 말까지는 재외공관 국감반 편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먼저 기관증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의 관계부서장, 재외공관의 경우 공사참사관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이상으로 하여 출석 요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증인은 총 152명으로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 간 협의에 따라 배부한 자료와 같이 증인 4명, 참고인 10명 등 총 14명을 출석요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예.

○**이인영 위원** 죄송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혹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 두시고 의결해 주시면…… 그래서 3당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위임을 받아 놓으시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에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인영 위원** 가능하기는 할 텐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26일, 27일 날 본부 국감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해외 국감을 나가 가지고 의결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김경협 위원** 아마 26일, 27일 날 의결하면 될 거예요, 추가 증인.

○**위원장 심재권** 제 생각에, 정확한 날짜를 원내 행정실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까지 신청해 주시고 언제까지 논의를 마쳐 주시도록. 추가신청이 있으면 저하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이상 말씀드린 국정감사 관련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총 1665건의 서류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류제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및 C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구서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국감 실시에 필요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0. 현안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12시13분)

○위원장 심재권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금년 중 북한의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를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은 8월 24일과 9월 5일 각각 SLBM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4차 핵실험 이후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당국의 SLBM 발사 등 일련의 모든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반대를 표명하며, 아울러 북한 당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꼭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 후보지의 검토로 지역 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 이상 국회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 읽고 왔으니까 시간 절약 위해서 현안보고 간단히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심재권 차관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보고서를 잘 보셨다고 하니까 요점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대리하여 오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안은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료 1쪽, 북핵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 실험에 이어 바로 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충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집권 18년간 총 16발의 도발 숫자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8월 24일 SLBM 발사를 계기로 직전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성명이 채택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시진핑 주석도 어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과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자료 2쪽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및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결과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운, 금융, 대외 교역, 군정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6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북한 공관 개설과 고위인사 교류, 협력 프로그램 등을 보류 또는 중단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이 올해 15% 증가하고 고위급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으로 탈북이 확대되는 것은 그간의 제재·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마저도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자인하는 등 북한 스스로도 압박을 실감하고 위기 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양자외교 일정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7월 8일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변국 동향과 관련,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시 양자 및 북핵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와 관련 정상 간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편 사드 관련 여러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사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 문제에 대해

건설적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북핵 불용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관련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움직임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취한 자위적 방어조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 등 여러 기회를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한중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소통 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중 간의 소통을 통한 건설적·포괄적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행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 조치인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일에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 출연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단 설립 및 재단 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 임원 구성과 재단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재단 사업 대상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사업은 개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입니다.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규모,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 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은 추모·위령 사업 등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실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합의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재단 사업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

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통일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체제 위기감 극복 차원에서 사회통제 및 체제 결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심화에 대해서는 자강력 제일주의와 노력동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명분으로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의 불만 및 피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친북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여 김정은 인권제재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하고, 대화통로 단절 및 다계단의 사변적 행동조치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대남 동향입니다.

북한은 8·15 계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등 남북 공동행사를 이용한 통전 차원의 대남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8·15 경축사, 사드 배치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북핵 관련 발언 등을 빌미로 원색 비난을 전개하는 한편 핵보유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핵 참화 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 현실을 왜곡 선전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도발 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능력 고도화 및 SLBM·무수단 등 투발수단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미·대남 도발과 위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력시위 차원에서 최근 SLBM과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UFG 연습에 대해 ‘핵전쟁 도발’로 왜곡하면서 총참모부 등을 통해 핵선제 타격 등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북제재 추진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포괄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북제재를 부과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역·해운 등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이 위축되고, 전년 동기 대비 북중 무역 규모 및 무연탄 등 제재 대상 품목의 거래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외무역 축소, 금융거래 제한, 인적 제재 등으로 해외 파견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외환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송출 여건 악화, 해외 식당 휴·폐업 업소 증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화 수입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런 외화난 타개를 위해 상납금 요구 등 압박이 심화되면서 해외 주재원의 동요 및 이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제재 극복을 위해 주민 동원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자강력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주력하면서 무리한 노력동원을 지속하고 희생된 주민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공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내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성공단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제도의 틀을 넘어 별도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규·특별 대출,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지원과 함께 기업·근로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규모, 보험제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및 별도 예비비 편성을 통해 520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경험보험 제도에 따라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지원율을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해서는 월 임금 6개월분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기업·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개성공단지원재단 협업을 통해 현장 방문 및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대책

을 집행한 이후 기업과의 소통 및 정부 내 협업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통일공감대 형성입니다.

정부는 통일·문화를 연계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콘텐츠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학교·사회 통일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도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비행기 타러 가야 해서 내가 먼저 좀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운영석 간사님.

○위원장 심재권 우리 윤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운영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윤영석 간사님, 고마워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고요, 큰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임 차관님, 사드가 뭐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종말 단계에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강창일 위원 고고도, 고고도.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중고도도 아니고 고고도예요, 고고도.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강창일 위원 어디를 타것으로 합니까? 고고도 미사일은 어디를 타것으로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한 140km 정도까지를 가다가……

○강창일 위원 올라가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는 저고도·중고도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고고도라는 것은 아주 위로 올라가서 멀리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국가안보 운운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의 주적이 어디예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단 고고도……

○강창일 위원 북한의 주적이 어디냐고, 북한의 주적? 북한은 주적을 어디로 삼고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북한이 생각하는 주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창일 위원 예.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위원 허허 참! 북한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미국도 물론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미국이라고,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적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우리의 주적은 어디예요? 우리는 북한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의 외교정책에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할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위 이런 운운은 다 웃어 버려요. 북한의 미사일·핵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위원님,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꼭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 우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여기에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후속조치 소통 추진’, 별로 안 보이던데? 한·러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얘기 거론했어? 안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 하지 마시고, 만일에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러시아 정상 푸틴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사드 문제 언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달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한 얘기 아니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뭐 소통 강화했다고 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무슨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 정상이 만나서 크게 사드 문제 합의 본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래요. 자료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소통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장관 노고했는데 위안부 문제 말이지요, 또 한번 여쭙 볼게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말씀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우리 임 차관은 일본통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통은 아니고 일본에 잠깐 있었습시다.

○강창일 위원 윤병세 장관은 전혀, 짹 짹 막혀 있다. 일본을 하나도 몰라요.

다시 한번, 보상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한번 얘기해,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또 사과, 배상을 하고……

○강창일 위원 일본 정부 책임 인정은 좋은데……

아니, 돈 받았으면 성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금이나 위로금이나 간단히 얘기해 봐요.

자, 보상금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창일 위원 못 합니까? 인정합니까, 못 합니까? ‘예스, 노’만 얘기해 봐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예스, 노’로 답변하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답변 못 하지요?

돈 한 푼 받으면 돈 성격을 명확히 해서 돈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돈 한 푼 받으면 돈 한 푼 인정하면서 돈 받아야지 뭐 어디 뒷거래, 밀수장사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고충을. 우물쭈물쩍하게 지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봤더니 1억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 돈 때문에 이것 하는 것입니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 한국 정부가.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할머니들 자존심을 당연히 저희 정부가 상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 1억 원, 신문에도 1억 원 준다…… 할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외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자존심과 명예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왜 돈 문제를 꺼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것은 합의된 사실이기에 때문이에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합의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소녀상 철거 문제에 노력한다 등등 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고, 국민적 자존심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더 이상 돈 얘기 꺼내서 할머니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할머니들 만나니까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만나서 돈 1억 준다…… 아, 돈 필요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또 분열시켜 놓고. 제발 이렇게들 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얘기, 지금 우리 외교부 욕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제발 할머니들 자존심 더 이상……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 한 사람이라도. 할머니 단 한 분이라도 그렇게 자존심 꺾지 말라고, 돈 얘기 꺼내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래도 필요한 대화는 할머니들이랑 해 나갈……

○**강창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에요, 구두로 하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꾸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말이지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화나 있는데. 제발 좀…… 하이고 나 참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다음에 말이지요, 우리 통일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강창일 위원** 통일부 요즘 이름도 잘 안 보여요, 통일부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조사·연구하는 기관 같아요. 심지어는 세간에 반통일부, 탈북민 보호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안 보여, 안 보여. 통일에 대해서 안 보여요.

오늘 업무보고도 말이에요, 이것 무슨 통일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욕하는 데 그냥 전부 할애했어, 업무보고가. 통일하려고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 붕괴시켜서 통일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세요. 이것 전부 다 그냥 북한은 나쁜 놈들, 나쁜 정권 막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뭐 통일하겠다는 얘기에요, 반통일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좀 진지하게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 좀 보여 주십시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 이것.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깐 그것을 일단 보고드린 것이고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랑 대화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붕괴시키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창일 위원** 저기……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제대로 대화를 해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강창일 위원** 나쁜 짓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

떻게 달래면서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잘 피기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쁜 짓 한다고 자꾸 욕만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통일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권 말이지요.

최고의 인권은 뭐니까? 최고의 인권이 뭘 줄 압니까? 북한인권법 운운하면서 잔뜩 써 놔는데 최고의 인권은 밥 세끼 먹는 것, 생존이에요. 두 번째 뭘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문제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 인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밥 세끼 먹게 할까, 어떻게 자유를 갖다 줄까…… 통일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북한인권법 시행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북한 욕하는 데 써 먹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인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이 뭘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과 자유권이 모두 다 중요한 그런 권리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의 그런 자유권, 또 정치권 차원에서 인권을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부분과 인도적 지원 부분이 그 인권법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데, 이것 업무보고할 때도 생존의 문제, 북한 주민들 지금 밥 세끼 못 먹고 있는데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도 써 줘야지요. 그리고 북한에 어떻게 자유의 바람을 전파할까 이 고민도 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현안보고는 말씀 그대로 최근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짧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짧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써 주세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밥 세끼 먹게 할까, 어떻게 인도적 지원할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자유의 바람을 거기에 불어넣을

까 이런 고민들 좀 담아 주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 윤영석 위원이에요.

○**위원장 심재권** 조금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서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요? 그리고 내일 또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상당히 긴박한 그런 외교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외교와 통일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항상 심기일전의 그런 각오로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회담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미·중 간에 사드를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를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한·미·중 간에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의사를 중국 측에 표시를 한 만큼 중국 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차분하게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저도 최근에 중국의 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의 전문가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이 사드에 대해서 좀 상호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부분

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화해·치유재단이 설립이 되고 일본 정부에서도 10억 엔의 거출금을 지금 제출 완료했지요, 9월 1일 자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곧 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앞으로 이 재단의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아마도 9월 달, 10월 달에 걸쳐서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할머니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단 쪽에서 할머니들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할머니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나서 그리고 재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기존의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또 생존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인도적 지원금이다’ 이렇게, 국제기관 등에 지급하는 거출금을 인도적 지원금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게 배상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 당시에 이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합의 당시에 이 돈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우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을 했고—지난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또 두 번째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또 세 번째로는 정부 예산으로 이번에 재단에 일본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표시로서 이번에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배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돈의 성격을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 일본군 위안부 과정에서. 그래서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결과적으로 관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일본 총리가 사죄 및 반성을 했다는 것이 두 가지는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어떤 입장 차이나 해석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또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빠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의 전제조건으로 이번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성실히 지켜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 전제라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인지 하는 것도 앞으로 상당한 양국 간의 해석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마치 10억 엔을 지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그런 성실한 이행을 다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10억 엔을 지출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지, 아니면 다른 뭐가 또 있는 것인지, 성실히 이 합의를 이행을 해야 할 다른 뭔가 의무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성실한 합의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는 물론 일본 측이 약속한 10억 엔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는 게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표명한 역사 인식, 다시 말씀드리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또 이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총리가 내각 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시한다는 그러한 역사 인식이 또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게 10억 엔을 지출함으로써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합의 전체가 온전하게 유지·이행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번 합의의 전제에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또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걸맞게 일본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해나가야 되고, 또 이러한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호 양국 간에 어떤 해석의 차이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윤영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진실 규명이라든지 또 후세대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부분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대에 대하여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 여러 가지 진실들을 후세에게 분명히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한일 간 협의 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니다.

추석이 한 주일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추석 명절 잘 쇠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정세균 의장께서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여야 중진 의원들이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남북 당국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통일부의 태도를 보면 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만약에 북한에서 먼저 제의해 올 경우 그때 가서 고려할 것이 다라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지금 인도적인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판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이고 빨리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신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이 이미 지난 4월에도 ‘이산가족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원혜영 위원** 북한 입장도 그렇고, 그런데 통일부의 입장도 이 상황에 이산가족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이산가족분들의 그런 아픔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 이산가족을 저희가 먼저 제안……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지로 이산가족분들의 그런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때까지 북한의 태도를 감안했을 때 결국은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 이산가족 문제를 또 이용하려 들 것이고요. 그러면 이산가족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현재 정부의 입장, 통일부의 입

장은 제재와 압박이 정부의 정책 기조니까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이런 인도적 문제도 결국 따로 떼어서 다룰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재와 압박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도적 문제이고, 그래서 이 인도적 문제는 사실은 별개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북측이 이런 것들을 별개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불리 이산가족 문제를 제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 저는 북한의 수준과 방식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은 정말 우리 운신의 폭을 더 좁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적 위치라든가, 좀 더 포용적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갈 때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북한의 반응 예측하고 그러면 할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좀, 비록 정부 내에서 견해차가 있더라도 통일부는 확고하게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일을 해야지 그나마 대북 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추석 앞두고, 저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지 말까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 어떤 부서보다 당연히 통일부가 이산가족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수준을 맞출 수 없고—맞출 만한 수준도 아니지만—어쨌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나 예상 태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더 크고 넓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일단 칸막이를 넓게 치고, 그래서 북한이 그런 환경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나 탈출구를 찾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렵더라도 통일부에서 이것의 독자적인 의미와 성격을 잘 좀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포기하고 그냥 눈치……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내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눈치 보는 것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필요한 부분 조치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에 좀 묻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9월 1일 날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 재단이 수령한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현금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급할 예정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현금으로 지급해 나가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9월·10월 두 달 동안은 아마 재단 쪽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더 면담을 해서 희망하시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런데 김태현 이사장이라는 분이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도된 바에 보면 ‘생존한 분은 1억 원, 사망하신 분은 유족에게 2000만 원씩 현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다 결정해 놓고 나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또 혹시 할머니들 중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서비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바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본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받아다가 일본은 다 손 털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할머니들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100억 예산 가지고 하자고 그럴 때 우리 국회에서는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고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런

데 괜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 끌어들이고 국민적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돈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1억씩 주겠다고 다 정해서 발표해 놓고 그러고 할머니들의,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된 일을 하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우선 하나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 돈의 성격이 그냥 돈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또 일본 내각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한 위에서, 그러한 책임 인정과 사죄와 반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지출했기 때문에…… 물론 같은 돈입니다마는 돈의 성격이 그야말로 10억 엔을 그냥 지출하는 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1억 원이다, 20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액수를 아주 딱 잘라지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에서 하겠다고……

○원혜영 위원 글썄, 그러니까 그래 놓으면, 큰 틀을 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현금으로 줄 거냐 뭐로 줄 거냐,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협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여섯 명의 할머니들께서 수령 거부를 선언했고 또 열두 분의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피해 구제를 포기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의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사업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해 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과 유가족 의견 수렴부터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두 달 동안에는 그동안 재단 쪽에서 만나 뵙지 못한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더 많은 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두 분 장관님, 외교부차관님과 통일부장관님, 오늘 아침 신문에 두 분의 기고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는 윤병세 장관께서 서울경제신문에 ‘뉴노멀 시대와 G20의 역할’이라는 이것 보셨나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양석 위원** 자세히 못 봤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님은 한겨레신문에 정세현 전 장관께서 ‘북핵·미사일·사드가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기고문 보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저께 나온 것……

○**정양석 위원** 예, 월요일 날.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읽었습니다.

○**정양석 위원** 읽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그래요. 우선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우선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G20가 중국에서 본래의 목적 때문에 정례적으로 열리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주변 국가에 이해를 구하고 또 오해를 풀어 주는 게 G20 참가의 최고 목적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G20 계기에 양자 회담……

○**정양석 위원** 최고 우선순위지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할 만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중국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또 속내는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일선 외교관의 역할이고 외교부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 원인들을 알아야 외교적 대책이 세워지는데 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가 중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첫째는 그럴 수 있지요. 중국 사람들, 중국인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국의 핵심 이익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안보 라인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말 국방적 개념의 반대인 건지, 정말 그게 본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률적 대처를 하지 못해서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혹은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위 국내에서 자기, 남중국해에서 잃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강건하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어로 미엔즈(面子)라고 하는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사람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쓰리 노(3No) 정책을 했던 말이에요. 전부 부인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속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의 감정을 잘못 읽은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디테일을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맞춤형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다……
관련해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한중 간에 4개의 전략적 대화채널을 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정양석 위원** 4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대화를 정례화하자, 두 번째는 외교·안보대화, 2 플러스 2로 이렇게 하자, 세 번째는 국책연구기관 간에 합동 전략대화를 하자, 그다음에 정당 간 정책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다른 것은 그래도 한 두 번씩 했는데 김장수 안보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 간에 대화한 게 2013년 11월에 단 한 번 있고 말았어요. 그리고 15년 9월에 김관진 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 간의 만남이 보도되고 또 실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전략적 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꾸준히 실무선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대통령에게만 이런 문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김장수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었을 때는 양제츠 국무위원과의 만남이 격에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이분이 중국대사로 가서서, 차관님 아시지만 중국대사가 국무위원 만날 수 있나요? 만나 줘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사실상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외교 라인에서 수시로 건의하고 실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의 요번 사드 관련한 의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도 계속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4개 전략대화채널 중에 우리 안보실장과 중국 측 국무위원 간에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 이것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사실 저희도 이런 대화채널이 보다 더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님 방중을 계기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차관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전에 했어야지요. 예측가능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했어야지요. 이제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중일 삼각 그런 안보대화도 제의 잘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외교부가 좀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물밑 대화를 했더라면 이번 G20에 대통령이 가서서 사드 문제를 보다 더 부드럽게 잘 정리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윤병세 장관님 기고문을 보고, 우리나라 역할이, 이번에 G20에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좀 한가해 보입니다. 지금 정말 엄중한 최고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이런 데 노력하시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아마 경제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집중해서 기고하신 것 같

습니다.

○정양석 위원 경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장관 그렇게 보좌하지 말고, 또 대통령께 그렇게 부담을 드리지 말고 소신껏 할 일 좀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장수 장관, 장수 외교부가 그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소신껏 대통령에게 건의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것 다 대통령에게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통일부장관님, 요새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사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통일업무를 해 보시고 남북 대화도 많이 해 보시고 또 남북관계에 공로가 많으신 정세현 장관님께서 어제 칼럼은 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어때요? 전직 장관님들께 우리 정책을 설명드리고 이런 대화채널이 별로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직 장관님들과는 저도 뵙기도 하고 또 지난 연말에 시간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같이 일했던 통일부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만나서 소통도 하고는 합니다.

전직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쓰신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단니까요. 당당하게 ‘미안하지만 통일부 선배이지만 그 이론은 틀렸습니다’ 하고 통일부가 나서 줘야지요, 그것 개인적으로 코멘트하지 않게. 그러면 누가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칼럼은 저도 어제 마침 읽어 봤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일부 내용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좀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도 봤고요. 부정적인 평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우리의 국민의 63%가 재협상해야 한다, 21%는 그래서 안 된다, 16%는 의견을 유보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전통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정부여당을 지지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8%가 재협상해야 되고 33%가 재협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재협상해야 된다 이게 39%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32%에 불과해요.

이것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글썽, 아까 이미 다 지적을 해 주셨습시다마는 보다 더 분명한 방식의, 분명한 내용의 합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발표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조약이나 협정문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합의문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발표로 이렇게 처리한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것의 외교적 효력은 어느 수준에 있는 겁니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의성실 이런 정도로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나라와 나라 사이의 합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무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이인영 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같은 얘기잖아요. 구속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싶습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정도, 예를 들면 ‘불가역적이고 최

종적이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발표 내용을 합의문이나 아니면 협정, 조약 이런 것으로 하지 않은 혹은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 다 찾아보셔 가지고 국감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제가 볼 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이렇게까지 확정하고 단정하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 와서 비준이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예지만 FTA 같은 경우 래칫 조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지요?

그런데 그런 협정이나 조약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준에서 합의문이 작성도 안 된 구두로 발표하는 수준에서 있었던 일을 그 내용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확정적으로 못 박는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합의의 정신 속에서 예컨대 이러저러하게 조치들이 취해져 나가면,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돼 나가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신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역사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이 합의의 정신들은 유효하고, 표현대로 하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그것을 깬 것 같은데요?

예컨대 2016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라는 사람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라고 발 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과한 당사국의 사후적 태도입

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합의문 저는 부정하지만 그 합의문 정신에 의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들이 그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협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외교부의 입장이 과연 정당한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바로 말씀하신 스키야마 외무성의 발언은 외교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측에게 엄중히 지적을 했고요. 또 일본 측의 태도가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잘못된 발언은……

○이인영 위원 일본의 어떤 태도에 대해 표방하시는 것이야 당연히 하실 일이지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가 이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합의정신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재협상하거나 이런 변경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다 이거예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 10억 엔의 성격이 뭐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이인영 위원 아까 배상·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 자금의 지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 혹은 보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기시다 외상이 참의원에 참석해 가지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니까? 일본은 이렇게 배상·보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번에 10억 엔 주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면 침묵은 그런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자기들의 책무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10억 엔 지출 자체에 대한 책무를 얘기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이인영 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시면서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조차도, 잘못된 합의조차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배·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말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위로금이라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신들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아주 눈꼬리만큼의……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돈의 성격이 뭐고 이렇게 10억 엔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왜 분명하게 못 해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합의가 이행돼 가는 걸 봐야 되니까요.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합의 내용이나 합의 정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고 변형하고 보완하고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재협상의 요구 이런 건 지극히 정당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게…… 국민들도 63% 이상이 재협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외교부만이 나서서 온몸으로 ‘재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라고 막고 있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만에 하나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12월 28일 합의보다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 연말의 합의보다 훨씬 훌륭한 역사적인 화해와 치유의 정신들이 있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고노담화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거에 대한 사죄 혹은 사과 이런 것들이 훨씬 진전돼 있던 게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그것을 통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말 발전적인 양국의 화해와 치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지난해 연말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나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외교부가 하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12월 28일 합의는 고노담화라든지 이런 과거 합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합의고요.

○이인영 위원 그것보다 못 하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판단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위안부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책에 관한 한은 아마도 12월 28일 합의가 그동안 거론돼 왔던 어떤 합의보다도 더 나은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질의시간을 더 안 주실 거지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새) 위원 저는 외교부차관계 사드 문제하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남미 좌파 포폴리즘 몰락 같은 그런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통일부장관계는 최근에 외교관 탈북이나 처형 같은 북한 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다자·순방외교를 연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그리고 G20 회담 또 라오스 가서 하는데 물론 G20 같은 건 주로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국제회의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주요국의 지도자하고 과연 어떤 인식을 갖느냐 하는 관점에서 매우 주목이 된 정상외교인데 사드 관련해서는 이번에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임하는 자세나 전략적인 목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순방외교에 나

섰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어떻게 보면 정상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대통령님께서 직접 우리 입장을 설명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해도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한·러 관계,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중국이 사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매우 주목되는 그거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크게 보면 최악은 면했다, 그리고 중국과는 여전히 평행선과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같이한 것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추가로 어떤 진전이 있을지는 사드 문제의 진전에 따른 중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아마도 물밑 대화나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잘 진행을 시켜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더 이상의 파열음,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이번에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리고 임성남 차관께서는 주영대사를 지내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그게 철회된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영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소위 동구라파 이민이라든지 이런 해외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 간다라고 생각한 게 국민정서를 바꾸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것은 최근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영국을 한번 갔다 와서 주요 인사들을 죽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에다가 소위 정치인들의 어떤 불장난 이것이 저지른 한마디로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특히 집권 여당 보수당 내의 분열이—캐머런 총리와 존스 간에 서로의 정치적인 야심의 차이에 따른 불장난이 저지른—영국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자살골이다 이런 평가를 하던데 영국대사를 지내신 임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론적으로 보자면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부친 결정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실험이었다고 결과가 결국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섬찝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영국으로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결정을 내려 놓고 이것 가지고 전전궁궁, 안 해도 될 결정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게 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른 부서와 관련이 됩니까라는 탈퇴가 확정되면 또 FTA를 새로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아마 외교적인 또 통상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서, 지금 남미 좌파 포퓰리즘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로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남미의 좌파정부가 퇴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미 좌파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집권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들을 결국은 지

키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부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경환(새)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걸고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서, 시장경제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지탱하기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정책을 소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 왔고, 또 자원 가격이 좋았을 때의 일시적인 윈드폴 인컴(Windfall income)을 항구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퍼 준 그런 포퓰리즘이 초래한 어쨌면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거의 파탄 직전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남미의 큰 대륙 자체가 좌파 포퓰리즘에서 시장경제, 우파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입장에서든 그런 큰 추세, 변화 이런 걸 잘 감안한 외교전략이 새로 수립돼야 된다.

특히 이번에 G20에 참석한 브라질 새 대통령, 제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까마는 그분은 지금 와 가지고 바로 수주활동이나 여러 가지 시장적인 확대정책, 기업정책 이런 것들을 펴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우리 외교 쪽에서 잘 캐치를 하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경환 위원(새)** 최근에 김정은의 폭압정치 이런 것 때문에 외교관도 탈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가 총살됐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교육부총리……

○**최경환 위원(새)** 최근에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이런 특징이 과거하고 다른 심각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단초로 보는 건지, 과거에 흔히 있어 왔던 일련의 그런 걸로 보는지 이 인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북한의 고위 엘리트

층에 대한 처형 문제는 분명히 일단 김정은 시기에 와서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최근에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최경환 위원(새)** 최근의 특징적인 동향을 좀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최근에 처형할 때 고위층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소위 혁명화 교육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다는가 하는 식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제재의 효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제재로 인해서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납금 등의 압박이 들어가고 또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과 압박이 주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북한 해외 거주민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경환 위원(새)** 북핵 사태에 따른 제재 강화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써져 있는 문구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문서로 합의한 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합의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구두 문안은 있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구두 문안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한다, 그러면서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정도

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노력해 나간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홍문종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러나 국민 여론 이런 것을 다 봐 가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홍문종 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문구는 거기다 꼭 집어 넣었어야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것은 그 당시 협상 과정에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마는, 또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일본 측의 그런 입장을 아마 좀 고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물론 구두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말이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되었던, 그런 의미가 되었던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철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그냥 우리는 잘 모른다. 노력한다고 그랬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걸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이 정도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해서 그거 하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이 거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거 협상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협상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에서도 여론이 좀 나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가 이 협상을 한 것은 그동안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걸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교 문제에서 정치 문제 또 경제 문제로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협이 활발해지고 정치가 복원되는 느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 또 일본 사람들의 정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고 좀 더 항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옳지 않았겠나.

우리가 너무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 나머지, 이거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가 소홀했지 않았나,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모든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든지 100% 만족할 결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이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애매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리스판스(response)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두로 하는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런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언젠가는 우리한테 더 나쁜 결과로, 그야말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또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정부로서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일본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잘했다 박수 받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있고 극우세력들이 있고 자민당이 있고 아베가 있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 잡는 일을 했느냐? 물론 일본에서 그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꼭 소녀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안 집어넣고도 그것을 의미할 수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다시 이걸 또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처럼 열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뭘 하는데 있어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더 주도면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가 그런 합의를 할 것을, 이미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부를 잘 정리를 했어야지요. 지금 그게 됩니까? 우리가 해 놓고 결국은 가서 돈을 드린다고 그러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리고 정부에 소송한다고 그리고 재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협상이 임박했으면, 결론을 내린다는 게 임박했으면 그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에서 미리 위안부 할머니가 되었던 재단이 되었던 우리 말마

따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게 합의와 동시에 그분들이 박수치고 재단에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결국은 합의는 됐고 할머니는 돈을 안 받는다고 그리고 재단은 난리가 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이것을 재협상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 지금 저희가 그 뒤처리를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은요, 윤병세 장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클린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고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제 느낌에 잘 컨택트(contact)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턴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은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 우리 외교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트럼프처럼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저런 외교에 대해서 아주 무능하고 그야말로 외교도 모르는 사람이 되겠느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클린턴 이메일 사건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주로 주미대사관 중심으로 해서 또 주미 지역의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안보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계가 아주 밀접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교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비상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추측이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우리 한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돌출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배치 이후에 정상회담들이 연이어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9월 3일 날 한·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9월 4일 날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계속 연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현안보고 자료에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까, 한·러 정상회의에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러시아 측이 발표한 발표문에는 ‘사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

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언론 발표나 러시아 쪽에서는 전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어제였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사드 관련 여러 가지 후속 소통 추진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 언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 배치 반대했다’라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부 사드 배치로,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최대한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면전에서 바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를 한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회담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국 측이 다 경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국 측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 달라요,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하고 현지 언론이 하는 얘기하고 저쪽 상대방 국가가 하는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외교 문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현실을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사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으면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외교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중 정상회담 하루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히 표현을 했어

요. 이것은 이미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와도 협의하고 있고 또 당연히 미국이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여기서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에게 바로, 이것도 직접 바로 항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뒤늦게 한국 정부가 조건부 사드배치론,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는 철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외교전술인데, 그 전날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했던 얘기를 보건대 이미 중국이 사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상당 정도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다음 날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혀 먹히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결국은 면전에서 거부당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 명확하게 딱 반대 입장 표시하고, 외교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지요. 전혀 성과를 못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졌던 목표는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7월 8일에 저희가 사드 배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갖는 회담이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처음 갖는 회담이라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직접 정상 간에 사드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겁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사드를 전혀 설득도 못 했고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좋은 기회에 전혀 설득을 못 했고.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외교부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중국의 입장은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담이 처음 회담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소통하는……

○**김경협** 위원 실무적으로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가서 대통령 하신 말씀,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 전날 이미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파악을 하면 이날 한중 정상 회담은 달라야지요. 적어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다시 준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그나마 사드 문제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보는데 이건 이번에 완전히 외교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8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영국 공사의 탈북이라든지 처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우리 통일부가, 이런 북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북 정책, 남북관계를 풀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탈북을 했던 태 공사……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태영호 공사입니다.

○**김경협** 위원 태 공사가 북한의 권력서열 내에 몇 위쯤이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나 북한 어떤 매체에서 공식적인 서열이 발표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서열에 올라서지도 못할 서열인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황장엽 씨 있지요, 황장엽 씨.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황장엽 씨 탈북해서 망명했을 때, 그때도 북한이 곧 붕괴된다고 그랬어요, 외국 언론들도 그랬고.

황장엽 씨는 당 서열로 보면 몇 위였습니까? 굉장한 고위직이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태 공사는 당 서열에, 서열에 끼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은 얘기가, 그러면 태 공사가 망명하는 걸 가지고 심각한 체제의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태 공사 한 명의 탈북만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김경협** 위원 그러면 탈북자가 지금 현재……

○**통일부장관 홍용표** 또 붕괴를 저희가 얘기……

○**김경협** 위원 금년 대북제재 이후에 지금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탈북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일반인 탈북자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늘어난, 빠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일반인 탈북자보다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좀 더 고위층, 소위 엘리트층의 탈북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탈북자의 숫자 나온 것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제가 보는 숫자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체 탈북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예, 전체 탈북자.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체 탈북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습니다.

○**김경협** 위원 올해 늘어났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수치를, 정확한 수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김경협 위원** 수치를 한번 보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이태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러·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가지고 사드 배치 부분을 설득하시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표면에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건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이게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처음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소통 계기를 마련하는……

○**이태규 위원** 그래서 김경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점이 이것이 북핵용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자신들을 겨냥한 MD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금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 다른 레이더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KAMD나 이런 독자적인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나 이런 걸 구축한다고 했을 적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독자적인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드만큼은 독자적으로 북핵용이 아니라 자신들을 겨냥한 MD체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미국의 MD망과 연결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입니다마는 미측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MD와 무관하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미사일방어 문제 담당하는 군 간부가 와서도 그러한 점을 공개적으로 언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더구나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MD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때 미국은 체코나 폴란드, 루마니아의 MD를 이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된 이후 이제 MD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조건부배치론은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미 유럽에서 겪어 본 논리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건부 사드배치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북핵 문제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의 MD체계에 있는 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문제가 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MD체계가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선 미측도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위협이 없어지면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만약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요구한 게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또 길게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그렇게 이 문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만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중간에 소통을 더 강화하자는 그런 구상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기로 하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두 가지를 좀 더 여쭙 보겠습니다.

12월 28일 합의 발표 이후에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어떤 발언들이 일본 측에서 많이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특히 지난 2월 18일 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 출석해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합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이태규 위원**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일본의 12월 28일 사죄에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기본적으로 12월 28일 합의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일본도 큰 틀에서 생각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합의를 지켜 나갈 의사가 있는 정부 책임자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정성 있다고 이렇게 보시느냐, 이 부분에서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이 발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베 총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일본 외교 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문제를 제기했습니

다.

○**이태규 위원** 일본 입장은 뭐니까, 그러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본도 12월 28일 합의가 큰 틀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그 이후에는 일본 측에서 이러한 유사한 발언이 없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그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돼서 2월 달에 이나타 토모미 일본 신임 방위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10억 엔을 지원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올해 8월 달에 부임한 주한일본대사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정서하고 완전히 100%, 180도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비공식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협의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요, 철거해 달라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12월 28일의 합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수준에서 그런……

○**이태규 위원**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지금 상황하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데 저희도 국민여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고요. 일단 12월 28일 합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철거할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철거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나중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가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설적인 게 아니고요, 소녀상 철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합의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소녀상 철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게 아니라 합의에 나와 있는 그대로 관련 단체랑 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소녀상 문제를 저희가 국내적으로 추진한 바도 없고 또 일본에다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불가하니까 거론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구체적인 워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저희의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많은 위원들이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사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또 저도 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차관한테 한번 묻지요.

오늘 정상회담 이후,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언

론의 시각이 조금 다릅디다, 진보신문하고 보수신문. 예를 들면 보수신문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면충돌은 피했다, 또 사자성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다 이런 표현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또 일부 진보신문에는 면전에서 사드를 공식 반대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외교 전문가인 차관 입장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이런 부분, 언론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8일에 저희가 사드 배치를 공식발표하고 최초로 있었던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 그런 면에서 일단 상황이 관리가 되고 또 한중 간에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또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청원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번에 두 분의 사이라든가 두 분의 교분 이런 관계에서 좀 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실망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차관 말씀처럼 저는 외교든 뭐든 다 첫 술갈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에 전문 외교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서 중국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계 또는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저쪽 중국 정부의 외교 브레인, 학자들 이런 부분하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좀 추진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친중에 가까운 단체들까지 동원해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한테도 한번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

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외교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이 사드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의 형성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위원 저는 오늘 아침 신문,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습니까마는, 여기 위원장도 있습니다마는 아침 신문을 펼쳐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하는 언론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어떤 제목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명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 나는 이런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말씀이 만약에 중국의 언론에 보도됐거나 했을 경우에 이해의 폭이 많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회담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측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성적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 저는 사드에 반대했던 많은 우리 측의,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도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국가의 안위가 절박한가, 지금 회담 중에도 북한이 미사일 3발을 쏘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국내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나서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폭넓게 범정부적으로. 그 점을 한 번 좀 더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한테 조금만 묻겠어요.

최근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인들까지도 많이 대한관계에 대해서 감정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감정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 또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한 이후에 북한이 대단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중국이 두만강에서 압록강 쪽으로 교역이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북·중 접경지역에서 그런 교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익히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사드 문제에 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없이 원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무역들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청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리고, 지금 도문이라든가 이쪽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다른 때보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금 엄중하게 경비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탈북자들이 너무 넘쳐서 걱정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썽, 도문지역에 그렇게 급증했다는 얘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탈북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있는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제재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위원 지난번 주영공사 귀국 이후에 북한의 외교관들이 또 탈출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 보도는 있고요. 다만 그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신변안전 보장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청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외교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도읍 위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중국도 북핵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관련 여러 가지 후속 소통 추진에 공감을 했다.’ 외교적 관례로 볼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까지 한중 간에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물론 외무장관회담, 외무차관회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간의 채널도 있고 해서 그런 기존의 채널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협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널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면충돌은 피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언론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드 관련 여러 가지 후속 소통 추진에 공감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중국이 사드를 반대한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중국의 입장은 신화사 통신 보도 등을 통해서 저희와 다르다는 것을 중국 측이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후속 소통 추진을 하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그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사드 배치가 7월에 결정된 이후에 적어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실적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는, 실적이 없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국내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드를 반대하는데 하물며 중국이 어떻게 선뜻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해 줄까. 원 보이스로 가도 중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면 뭐합니까, 여전히 국내 일각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렇지요?

그래서 이번 한중·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북핵 대응체제인 사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월 1일 날 국회에서는 비상한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개회사에서 사드를 반대하면서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북핵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지금과 같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한국 아니라 어떤 나라도 주도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비핵화를 이끌기는 쉽지 않고, 결국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충실하게 갖추는 것, 완벽하게 갖추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곱씹어 봐도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사드 관련해서 이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중국과의 교역 문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 이런 걸 많이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7월 달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중국 측이 본격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교역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사드를 반대하는 명분 중의 하나로 경제제재를 들었는데 지금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추세를 볼 때는, 추이를 볼 때는 중국에서도 경제제재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경제제재 움직임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은 물론 우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 수준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역량 자체가 우리가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우리한테 수출해야 되고, 또 고부가가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먹이사슬이 철저하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너무 사드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이유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우리가 중국의 동향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외교부에다 주문을 한 것이 이제는 외교도 민생외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국내의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방점을 더 주고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재외공관도 그렇고 본국에 있는 외교부도 그렇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계속 펼치고 싶은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피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영해 침범을 넘어서 우리 서해 어민들의 민생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영해 침범을 하지 마라’ 이런 접근도 좋지만 ‘당신네들도 국민들 있지 않느냐, 당신네들 어선 불법 영해 침범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서 있다’라는 측면으로, 아까 감성적이라는 부분을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접근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두 가지 질문도 드리고 의견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연말의 한일 양 외교부장관 간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협상을 요구

해 왔는데 오늘 차관님 답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면서 ‘지난 합의가 고노담화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합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노담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노담화에는 위안부 모 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의 합의는 전혀 그런 내용이 빠져 있고 뭐 여타 미사여구로써 그것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부는 충분한, 충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야 함께 개성공단기업 피해 보상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다 더 진전된 그런 보상 요청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또 개성공단기업피해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도 빠진 피해지원금을 추석 전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가 옳았느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지 아니하게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조치의 하나로써 일정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를 들면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유동자산 703억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예비비 등을 통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개성공단 피해기업뿐만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들, 또 5·24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또 그 당시에는 보험제도도 미비해 있고 이럼으로 해서 충분한 지원 또는 보상도 받지 못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한편,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기업, 교역기업 포함

해서 이번 추석 앞두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서, 그게 어렵다면 특별대출로라도……’, 그러니까 2014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특별대출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투자기업, 교역기업 포함 시 100여 개 사에 200억 정도라도 추석자금을 대출해 줬으면 좋겠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이면 더욱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런 대출이라도 2014년 5월처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성공단 피해기업 전체 피해 지원은 어렵다 할지라도 유동자산 피해만은, 그건 협력업체 직원들 임금 이런 것 등등으로 다 쓰이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 그다음에 5·24 조치 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이번 추석 앞두고 반드시 꼭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우리 평통 권 사무처장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장 심재권** 지난번 7월 21일 평통 운영위원회 명의로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및 국론결집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우리 평통의 사업으로서 옳은 사업이 아니었다고, 평통 사업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때 우리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북한이 SLBM을 발사하고 난 그 직후에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핵과 미사일 그리고 날로 진화하는 SLBM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깊게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드……

○**위원장 심재권** 처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통이 해야 될 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또 통일에 관한 우리 사회 내의 여러 교육활동 이런 것 등등, 또 그런 사업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정책 건의 이것이 기본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평통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됐든,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됐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평통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지, 어떤 분이 찬성을 했고 어떤 분들이 반대를 했는지 전혀 자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 요청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서청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심재권** 예, 서청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원 위원** 내가 꽤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 위원장, 내가 많이 국회 경험을 했는데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질문한다든가 그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간혹 아쉬운 당부가 있으면 위원들을 시켜서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위원장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가끔 위원회 보면, 지난번 개성공단 폐쇄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위원장 입장에서 하고.

이 모든 회의에 위원장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감기관 이 사람들이 전부 위원장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그런 부분,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른 위원들을 시켜서 하든가 간사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너무하다. 위원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관행에도 어긋나고 위원장의 품위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어쨌든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로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

자면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청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평통 사무처장님, 7월 21일 날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내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평통 본연의 업무라고 어긋난다고 생각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사무처장으로서……

○정양석 위원 지금 우리 평통의 최고책임자, 회장이 누구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의장은 대통령이십니다.

○정양석 위원 대통령이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정양석 위원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를 들면 평통이 선거에 개입한 다든가 혹은 특정 정파에 관련되어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기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는 평통이라는 기구가 이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를 내지 못한다면 나는 오히려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통도 그런 입장은 당당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뭐 안 내신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세요? 의사 표시 했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당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요구되었는데 그 회의록상에 있는 개인 신상들이 조금 검토의 소지가 있어서 시간

이 지연되었지만 그 부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더군다나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가서 소신껏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관련해서, 인권법 후속 조치로 인권재단이 지금 출범하게 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그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관련한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지금, 오늘도 의사진행발언이나 지난번 정기국회 개회식이나 이런 것처럼 여소야대 영향이 있고, 거기에 지금 인권재단의 기구도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사가 열두 분 계시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열 분을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두 명은 정부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다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나중에 장관님, 인권재단 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여야 혹은 정당으로부터, 국회로부터…… 국회 추천이지만 결국 정당 추천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견해가 정말 다를 때,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각 추천 정당의 이해를 대표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방송통신위원회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나중에 북한 인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내부 이념논쟁이 벌어지면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이 기구를 꾸려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썽요, 인권재단은 지금 현재 법상—앞서 말씀드렸듯이—여야에서 다섯 분씩 추천을 하고, 정부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이 또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면……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이 문제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서 가지고 본연의 목적에 정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토론 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 내의 또 다른 무슨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지난번에 추경 논의가 되는 가운데 그 703억 문제가 나왔어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험제도에 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703억을 우선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의결해서 주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법적 근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정양석 위원 아니, 그게……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지금 인정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가 인정금액 아니냐고 그러는데 지금 회계법인이 보험가액으로 인정한 금액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그렇지만 보험가액이, 소위 부보율이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그 규정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703억이?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자자산에 대해 경험보험에 기업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주고, 다만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했

고요.

○정양석 위원 글썄, 그것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이 있지만 기업들이 가입을 안 했고……

○정양석 위원 문제는 안 했지만 지원해 주는데 소위 인정금액의 70% 그 규정에 묶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보험제도를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다, 가입이라든가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피해 지원 예산이 5079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된 게 74%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현재 74%……

○정양석 위원 왜 나머지는 지금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은 경험보험 쪽은 상당히 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기업들 계산에 따라서 안 받는 부분이 있고요. 유동자산은 한 50%가 넘었는데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또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9월 20일이 일단 마감 기한이라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상당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예상되는 문제들은 또 없나요? 아까 은행 지급보증이라든가……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은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도 제기하셨지만 지금 일부 기업들이 703억 전액을 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또 어떤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기업들마다 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기업들은 지금 정부가 준다는 피해지원금만이라도 빨리 받아서 정상화를 하기를 원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예비비까지 동원을 해서 마련해 놓은 5000억 원에 대한 피해지원금

을 빨리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해서 정상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보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양석 위원 하여튼 빨리 자세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외교부차관께서 ‘고노담화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안부와 관련하여 고노담화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당시에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방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여성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과 편지에서 보면 ‘우리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제가 순서 조금 바꿨습니다마는—과거의 무게로부터,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결코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정신을 이 앞에 구두 발표한 그 내용,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에도 없는데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더 진전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고노담화의 조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읽어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에도, 외교부장관님이나 아니면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고위 관료들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눈에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왜 경청하지 않고 역대 어떤 정권, 어떤 협상보다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제일 잘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합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

○이인영 위원 들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재단 출범에까지 나가고, 거기서 치유금…… 돈의 명목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1억 원이니 2000만 원이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이런 행위예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반지성적인 프로젝트를 스스로 행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통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평통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평통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니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이 정신 그대로, 이것 진짜 외교부차관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글자 그대로 활동하시면 좋겠어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관제 동원되던 그런 평통이었지요, 이념적 편향 이런 것들에서 특히. 그런데 지금 평통이 새로 거듭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가 발전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이념적 편향 이런 것들에 관제 동원되었던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스스로 성명서를, 역대 전원회의든 아니면 상임위 회의든 운영위원회든 이런 데서 채택했던 성명서 한번 죽 스스로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보세요. 거의 편향돼 있어요.

오히려 진짜 평화통일과 관련한 주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평통의 그것이 이것과는 반대로, 중요한 계기가 있고 역사적 진전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평화통일의 길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더 넓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처럼 도드라진 이런 행위가 지적되거나 비판받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결국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비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는데 한두 번 더 그러시면 그것은 저는 평통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이인영 위원** 그런 정도에서 그 취지를 좀 받아들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이따가, 제 질의 끝나고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인영 위원** 카자흐스탄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핵 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가지고 ‘카자흐스탄은 핵 실험장을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제거했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카자흐스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자발적 핵무기 제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른바 CTR이라는 코퍼러티브 스톤트 리덕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과정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 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도 좀 의아했다고 그러는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카자흐스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CTR이라는 것 자체가 카자흐스탄이 핵 포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면 CTR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CTR로 들어가면서 핵을 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인영 위원**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았고, 나중에 클린턴 정권하고 이 CTR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게 진척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의 사례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핵……

○**이인영 위원** 잠깐만요, 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심재권** 예.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 곧바로 CTR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운용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러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CTR이라는 것도……

○**이인영 위원** 아시다시피 CTR 과정은 포괄성, 협력성, 비대칭적 상호주의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진행되잖아요.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이른바 제재와 압박 국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례라는 것을 일대일로 다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중요시했던 사례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말 그대로 코퍼러티브 스톤트 리덕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력을 해서 스톤트(threat)를 없애기로 하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자, 그런데 그것 사실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왜곡이 아니지요. 왜곡이 아니고……

○**이인영 위원** 상호과정에 들어가면서 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날 회의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그러한 결심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결심이 없었으면 CTR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지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큰 차이점이 어쨌든 핵 포기를 결

심한 것이랑 핵 포기를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더 핵무기를 발사하는 그 상황이 너무 극명히 대비되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북한이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전혀 뭐 왜곡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그러면 국감에서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저는 상호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장관은 선 포기 결심, 후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선후를 따지고 이것보다……

○이인영 위원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상호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중요한 것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지도층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점이 북한한테 중요한 교훈이 되고, 북한도 그러한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결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왜곡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이인영 위원 북한이 결심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행위지요. 북한도 그것을 결심해야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것을 유발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호과정이었지 일방적으로 카자흐스탄이 포기하면서 협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인영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감정은 정권이 그 결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을 유발한 미국의 또 다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례를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유발하는 이런 상호과정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선 포기 결심의 과정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홍용표 장관이

전문가로서 조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자회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지만 북한은 거기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거기만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시면 안 돼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고요. 뭐 자료가 있으면 저도 충분히 드리고, 또 나중에 더 해명을 하겠습니다. 전혀 왜곡하거나 이럴 생각도 없었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 문제, 일단 이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다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주 9월 1일 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고 그래 가지고 집권여당이 사실 20대 국회를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며칠 동안 국회가 가동이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평통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드 배치 지지를 집단적으로 결의한 것, 정치행위라고 봐야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김경협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지지한다고 결의문을 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것은 정치행위, 거의 관제대모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통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저는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제나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김경협 위원 정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들 자문회의 위원들 구성을 보면……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엇그저께 여당 의원님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집단적으로 지지를 결의한 것은 당연히 정치행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의사진행에 당연히 공정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진행의 중립성·공정성이고,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통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적절하게 입장 발표를 국정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잠깐 간략하게 그러면 먼저 답변을……

○**김경협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놔두시고 나중에 국감에서 표시를 해 주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위원**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건부이고—사드 배치가—이래서 양해를 구한다, 만약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다 철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중국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한 것은 정면충돌에 해당되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제가 회담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워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마는……

○**김경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대통령께서 아마 양해를 구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나중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공식적인 경제제재가 없지요. 그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야당 의원님들이 중국에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공식적인 경제제재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제재가 예상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비공식적인 제재의 방식으로 온라인상의 불매운동, 한류 제재—한류스타들 출연금지·공연취소—지방 정부 간의 교류행사 취소, 투자 취소, 그다음에 통관절차 강화 등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일부 있습니다.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요.

아까 탈북자들이 늘고 있고 대북제재의 효과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심각한 체제 균열이고 체제 동요, 붕괴 조짐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탈북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보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탈북자 연도별로 추이를 봤더니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간 탈북자 합계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2009년인데 2900명 됐습니다, 2900명. 그런데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는 1500명, 2014년에는 1300명, 그다음에 금년 6월까지 749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7월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작년의 동기보다 늘어났고, 현재 추세를 보면 다시 한 1500명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김경협 위원** 작년에 보니까 통계가 잠정치로 나와 가지고 명확히, 확실하게 지금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작년에 1275명이 들

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7월까지 이미 700명이 넘어섰습니다. 현재 800명이 넘어갔고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잠정치라고 그래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 것하고 비교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하고 비교 문제가 아니라, 금년 지나봐야 되겠지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00명 이상으로 탈북자가 늘어나다가 금년 상반기까지 749명인데 이걸 가지고 대북제재의 효과이고 심각한 체제 균열이고 체제 동요하고 있고 곧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나는 맞느냐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일반 탈북인들의 증가 추세와 소위 해외에 있는 엘리트층의 탈북 추세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층의 탈북 추세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선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고 대북정책을 세워야지 자꾸 자기 방식대로, 희망사항대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착각하고 대북정책을 고수하니까 이게 대북정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풀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냉정하게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탈북자는 것을 체제 동요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저도 아까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엘리트층의 지금 탈북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현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까 제가 주장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대북제재의 효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체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을 선부르게 판단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2000명이 지금보다, 금년보다 훨씬 더 몇 배 많았던 2006년

에서 2011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황장엽 씨, 최고위층이 탈북했을 때도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 정권 곧 붕괴한다, 붕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있지만 30년 동안 붕괴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선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의 그런 말씀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붕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감정은 정권이 국경을 막고 있는 것과 중국에서 인원수가 준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오히려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러니까 2016년 전체는 잠정이지만 올해 9월 시점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것을 바로 어떤 체제의 동요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왜곡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경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안보나 대북 상황에 대한 정세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가 지난 8월 21일 날 대변인을 통해서, 일요일 날 최근 탈북 동향 및 북한 도발 가능성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추가 탈북 방지와 대남 국면 전환을 위해서 탈북민 위해, 해외 공관원·교민 납치, 인권활동 중인 반북활동가 암살,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테러 위협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임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거의 특별담화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라고 보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께서 다시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북한의 균열 조짐이나 체제 동요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가능성을 거론해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게 했고 또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이때 통일부 발표대로라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판단 근거가 통일부 자체적인 판단에서 대변인이 이런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합동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을 통일부가 대표로 한 것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그 당시에 브리핑한 상황과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테러 위협을 말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브리핑의 출발점은 그때 태영호 공사의 그런 탈북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우리 정부와 영국 정부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왜곡된 발표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과 탈북의 동향을 말씀드리면서, 또 때마침 그런 테러 위협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런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이태규 위원** 장관님, 그런데 이때 통일부 발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탈북민을 위해할 수 있다든가 공관원·교민을 납치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국정원 수준의 어떤 발표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통일부 발표대로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통일부 발표에 근거해서 이게 외교부나 군 또 검경이나 국정원 등 정보 관련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통일부 발표대로라면.

이것 발표 후에 통일부가 정부의 관련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계속 협의를 했고요. 외교부에서도 중국 공관 등을 통해서 여행객들한테 주의조치를 다시 한번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을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다른 부처에다 요청했습니까? 지금 대북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이리이러한 조치를 좀 취해 달라, 경각심을 가져 달라,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부의 다른 부처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들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통일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북활동가를 암살한다거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높다, 공관원·교민을 납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통일부장관 홍용표** 과거에도 그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사항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나 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필요한 사항들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이후에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부 관련 당국에 어떤 조치나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당연히 그런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 조치를 안 취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브리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좀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4일 날인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부적으로 주민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 같

은데, 체제가 동요되고 있다는 우리 정부 평가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이런 대남 적대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일부 대학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대남 적대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결속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대남 적개심이 일부 고조되었다는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체제 동요와 체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탈북민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사상교육과 여러 가지 통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주민들한테 먹혀들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적대의식을 가진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와 다른 계층, 엘리트 계층에서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해외에 있는 계층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층위가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붙여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회의 때 좀 더 자세하게 통일부의 어떤 판단 근거 여기에 대해서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외교부차관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어떤 제재와 압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안보리 협의 이행을 완전하게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과거보다 중국이 더 엄중하게, 더 정확하게 대북제재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중국이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한 만큼 보다 더 충실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엔 안보리 2270호 그것에 기반을 해서 정부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중국 당국의 이행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별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완벽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더 완벽히 갈 것이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권태오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김도읍 위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처장님께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운영위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지요, 사드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난 직후에 북한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 SLBM을 발사를 했고, 바로 그 직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연초부터 계속된 북한의 그런 일련의 도발에 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운영위원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론 결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열의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들은 그 배치 결정을 지지한다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자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 간사가 초안을 잡고 그 초안을 운영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 이따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 민주평통법의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일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법적인 구속은 없었고요. 그전에도 연초에 있었던 핵실험과 관련해서 결의문 발표도 있었고 또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론 결집 그리고 북핵을 규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우리 민주평통법 제2조(기능)를 보면 민주평통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번의 사드 지지 선언이?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여기에 들어갑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지금 통일로 나아가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북한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 우리 자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통일의 상대자인 북한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국론 결집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상당히 우려하는 가운데 자문위원들께서는 우리부터 먼저 국론 결집을 하고 단합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하다가 좀 중단되어서요.

언론에 났던 기사인데요,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언론 기사가 그 식당 지배인과 인터뷰를 했어요. ‘대북제재 때문에 집단 탈

북을 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배인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제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국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우리는 공개될 줄도 몰랐다. 북이나 남이나 정치 이기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대북제재의 효과라고 이렇게 억지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상황을 좀 오히려 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통일부장관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혹시 뭘 줄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김경협 위원** 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94년에 정립되어서 아직까지 변함없이 죽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화해·협력 단계, 그다음에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단계, 3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죽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체제의 심각한 균열 조짐’, 마치 ‘북한 붕괴론’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기준에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언급만 나오면 그것이 붕괴론이나 아니나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런데 최근에 정부 발표나……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붕괴론을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심각한 체제의 균열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핵개발과 국제사회와 위반되고 고립된, 잘

못된 행동을 하면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빨리 국제사회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다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북한이 국제사회로 들어오면 같이 평화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통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 아는데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대통령도, 우리 통일부도,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심각한 체제의 균열 조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것을 왜 했다고 보냐면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간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북제재의 효과를 어떻게 갖다가 하든지 만들어야 되겠는데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이렇게 해서 두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표현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북제재와 더불어서, 제재·압박과 더불어서 항상 필요한 게 대화가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게 과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죽 보면 대북 포용 정책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시절에. 약 한 10년간이었지요. 이때 북한이 미사일을 몇 번 쏘나 봤더니 두 번을 쏘어요. 핵실험을 몇 번 했느냐, 한 번 했습니다. 그 핵실험 한 번 한 이후에도 9·19 공동성명 형태로 해서 비핵화에 합의를 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깨졌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게 한 8년 정도 됩니다. 제재와 압박 정책으로 지금 돌아선 게 8년 정도 되는데 이 대북 압박 정책 시기에 미사일을 다섯 번, 장거리미사일, 그러니까 다섯 번을 쏘았습니다. SLBM, 네 번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SLBM과……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경협 위원 핵실험 3회. 그러니까 상황이 점

점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재와 압박과 때로는 대화 이 양면의,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전술이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구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비핵화나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갈 만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지 않고 오로지 그냥 제재·압박의 일변도로 가고 있는 것의 위험성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자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시간을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금 북한의 이런 크나큰 위협과 문제점, 이 문제점을 놓고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우리 스스로 내부의 어떤 문제를, 물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지만 내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높이고 정말 심각하게 핵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을 과거 정부의 장단점을 다 취합을 하면서 최선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현재는 북한이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고 대화를 하면 ‘아, 역시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대화에 나오는구나. 역시 이게 최고구나’라고 오판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다.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선불리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점을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1분 더 드리면 더 이상의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북핵을 비핵화 시켜야 된다는 목표는 같습니

다. 제가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방식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계속 검토할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지금쯤은 한번 다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고, 제재나 압박의 효과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국민을 이렇게 자꾸 현혹시키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면, 아까 식당 지배인이 인터뷰 한 것 중에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인터뷰할 때 분명히 지금 제재 때문에, 상납금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나중에 그것은 사실을 한번……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김경협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공개 사실도 분명히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 피해 업체 보니까 유동자산 문제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제까지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6건입니다. 피소된 개성공단 기업이 42개, 액수가 57억 6000만 원. 계속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는 이 하청업체들이, 원자재·부자재를 납품했던 하청업체들이 내일모레가 추석인데 임금 체불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긴급하게 유동자산 관련된 하청업체 비용들, 그 706억,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추석 전까지 지급하고 거기도 좀 추석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면서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도……

○**위원장 심재권** 끝으로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협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관은 핵과 미사일을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왜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정치적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이런 핵과 미사일 개발 또 그런 아주 공개적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고 경제 상태가 어려운데 그것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다 그런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주 일반적으로라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작년 당 창건일 그다음에 올해 당 대회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당 대회에서 결국은 강조한 것이 핵 능력이었습니다, 병진노선이었고요.

결국 그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핵 능력을 앞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체제를 결속하고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북한이 일단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단속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던지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그러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사일 실험을 또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자기들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와 비판의 입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쫓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불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크게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 플러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행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썄, 그것은 시점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병석 위원** 타임 스케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이면 제재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서, 언제쯤이면 나올 것이라는 내부의 판단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냐가 아니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의 단계에 이르고 실지 그것을 옹갠 경우엔 벌어질 사태,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함께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 점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북한이 왜 국제사회에 자기의 가장 우방까지도 반대하는 것을 계속 저러고 있는가,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거기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하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때,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경우에 어떠한 국제 게임의 룰이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즉 시간이 누구에게 더 불리한 거고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 이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절대권력을 유지한 핵보유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하면서 우선은 압박에 집중을 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석 위원** 핵보유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요.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2270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박병석 위원** 그런데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두 가지 경우에만 사실상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는 체제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겠지요, 체제의 보장을. 두 번째는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포기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점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요. 핵을 동결시키고 또는 폐기시키고, 현실적으로 폐기라는 것은 최후의 단계가 되겠습니까마는 핵을 동결시키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에 대해서는 국제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미국과 중국도 우리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지요. 대통령의 말씀따라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중국 공세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은 아시아 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 대화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끌려다니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을 것이나,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들어가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대한 정책 확립하고 우리 대선 들어가면 타이밍,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홍 장관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외교부에도……

제가 한 말씀의 취지를 잘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예.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미국에 끌려다니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대화가 필요할 때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푸틴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드와 관계된 워딩을 잘 보세요.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예요. 그것이 중국의 시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문제이고요 적어도 시진핑과 중국의 판단은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가 미국하고도 필요한 일은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 양측의 의견이 이번에 서로 교환이 됐고 그동안에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을 계속 하기로, 이번 에 그래도 논의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제 보장 그리고 포기의 이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새로운 기회의 창을 주겠다, 이득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체제 보장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또 역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병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심재권 예.

○박병석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차관의 답변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평통 사무처장에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미사일의 고도화, 이것은 전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 누구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사드의 문제는 국내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있고, 저희 평통자문위원들은 그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과 각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게 개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결의문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병석 위원 내가 처장하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통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임 차관께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동북아 정세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들은 외교부로서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 다마는 저희가 지금 대화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대화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면서, 아까 미국 대선 정국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저런 것을 다 잘 보면서 주도면밀하게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상 추가질의까지 마치면서 저도 다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평통 사무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제가 아까 지적한 바는 우리 평통 위원님들이 다양한 신분상에서 어떤 의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평통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평통법에 의거한 그러한 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21일 이 성명이 바로 그런 평통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평통 구성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의견도 그 자체 의견으로서 결집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평통의 이름으로 그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여기에 관해서 지난 7월 21일 성명에 대한 평통의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 개성공단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안 주

시는데 저는 정말 추석 앞두고 최소한 유동자산,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은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 또 5·24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추석맞이 자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5·24, 금강산 기업, 사실 이분들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만 어느 쪽이든지 예비비 이런 것 하는 것이 또 금방 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5·24, 금강산 기업들 생각하면 개성 기업들은 정말 많이 받았……

또 한 가지만 더 부가 말씀 드리면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8월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비비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를 포함한 피해 지원, 저희가 확보한 자금을 통한 피해 지원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 여러분들과 또 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 5·24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들, 정말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최소한의 추석맞이 자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마쳤기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윤영석 위원, 이인영 위원, 강창일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 저를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이나 구두로 요구하신 답변이나 자료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서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 사드 배치의 적절성 및 국회 동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깊은 걱정과 우려도 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외교·통일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들 안건들은 현안 해결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소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이나 합리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인도적 문제인데다가 가족 여러분들께서 고통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바 이산가족들의 오랜 그리움과 슬픔의 시간들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는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창일 김경협 김도읍 문희상

박병석 박주선 서청원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윤영석 이석현
이인영 이주영 이태규 정양석
최경환(새) 홍문중

○청가 위원(2인)

윤상현 추혜선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박정 이학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임성남
조정기획관 이현
문화외교국장 최영삼
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양자경제외교국장 천준호
북핵외교기획단장 김건
통일부
장관 홍용표
기획조정실장 김의도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교류협력국장 강종석
남북협력지구개발기획단장 이상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 7. 11. 박지원·김광수·김영춘·김종희·김해영·손금주·박재호·김관영·윤관석·이동섭·정성호·정인화·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

7월 12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12건 2016. 7. 14. 정부 제출)

이상 12건 7월 15일 회부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7. 26. 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

강창일·손금주·정동영·장정숙·박주선·

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2016. 7.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27일 회부됨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8. 17. 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광영·

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

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

8월 18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9. 홍익표·권미혁·박정·백혜련·

권칠승·문미옥·원혜영·이원욱·윤호중·

서영교 의원 발의)

8월 22일 회부됨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6. 김도읍·김성태·정태욱·김광림·

성일중·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

윤영석 의원 발의)

8월 29일 회부됨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2016. 8. 30. 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

이정미·김종대·김병관·김영호·소병훈·

임종성·유동수·김경협·김상희·김철민·

권미혁·정동영·황희·진선미·이개호·

김병기·주승용·위성곤·박범계·권은희·

표창원·노웅래 의원 발의)

8월 31일 회부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8. 31. 홍익표·김해영·진선미·황희·

정춘숙·서영교·이찬열·백혜련·이원욱·

인재근·어기구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2016. 9. 1. 정부 제출)

9월 2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원혜영·정갑윤·도종환·정인화·

윤영일·안규백·손혜원·윤후덕·이언주·

박주선 의원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9. 2. 주승용·정동영·이개호·김동철·

최도자·손금주·장정숙·강창일·이용호·

이용주 의원 발의)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9. 2. 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2016. 6. 21. 노회찬·강병원·권칠승·김경진·

김종대·김종훈·김영주·김영호·서영교·

신경민·신창현·심상정·우원식·윤관석·

윤소하·윤종오·윤후덕·이정미·이종걸·

이찬열·정성호·진선미·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

6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2016. 7. 15. 이현승·박맹우·이우현·홍철호·조원진·주광덕·신보라·함진규·이채익·전희경·김석기·윤영석·김성원·성일종·민경욱·최연혜·김명연·하태경·박덕흠·윤상현·이종배·민병두·엄용수·배덕광·조경태·박대출·김상훈·임이자·유의동·김용태·이진복·정용기·김현아·유기준·송희경·심재철·권성동·전해철·김영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안민석·유은혜·김병욱·노웅래·전혜숙·박남춘·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민병두·심상정·유승희·손혜원·정인화·도종환 의원 발의)

7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6. 8. 2. 김도읍·이학재·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신상진·강효상·김명연 의원 발의)

8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6. 8. 10. 권성동·유재중·이철우·경대수·김영우·곽상도·이종명·윤한홍·박명재·박덕흠·성일종 의원 발의)

8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6. 8. 11. 이현승·조경태·정유섭·김현아·지상욱·신보라·이진복·윤상현·김한표·김명연·홍철호·김도읍·유기준·유재중 의원 발의)

8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8. 19. 박홍근·이재정·문미옥·고용진·최명길·변재일·김성수·윤종오·신경민·유승희 의원 발의)

8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6. 8. 25. 김영우·조정식·이진복·백승주·윤종필·정성호·김현아·이종명·김영춘·경대수·김중로 의원 발의)

8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9. 2. 정부 제출)

9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7. 26. 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손금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

7월 2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회부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2016. 8. 8. 최요식 외 25인으로부터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 9일 회부됨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

(2016. 8. 12. 강창범으로부터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

(2016. 8. 12. 정종탁으로부터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8월 16일 회부됨